



심 포 지 업

인사말씀 003

일정표 005

[주제발표]

1.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007 유경춘 신부
2. 가톨릭사회복지 인권기반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037 김미옥 교수

[토론]

1. 사회복지 학계 075 김기덕 교수
2. 교계 083 박정우 신부
3. 사회복지 현장(1) 089 김정영 원장
4. 사회복지현장(2) 097 이철우 관장
5. 인권 관련 기관 105 김덕진 사무국장

인사말씀

2012년도의 막바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바쁜 시기에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가톨릭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사회복지학계 및 모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인간 존엄성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모든 활동과 사업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을 위한 실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거시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의 관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흐름 속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12년도 심포지엄을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인권의 가톨릭적인 근거와 가톨릭사회복지 안에서의 함의를 파악하고 인권이 조직 운영과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고 나타나야 하는지 등, 인권 기반 실천을 위한 방향과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기본적인 정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그 진정한 실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신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일정표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간	일정	
- 15:00	접수	
15:00-15:10	인사말씀 : 김용태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대리)	
15:10-15:40	주 제 발 표	전체사회 : 신혜선 교육·홍보 담당관
		주제발표 1.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_ 유경춘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15:40-16:10		주제발표 2. 가톨릭사회복지 인권 기반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_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10-16:20	휴 식	
16:20-17:10	토 론	좌장 :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토론1. 사회복지 학계 _ 김기덕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2. 교계 _ 박정우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토론3. 사회복지현장 _ 김정영 원장(사랑손보호작업장) _ 이철우 관장(등촌7종합사회복지관)
		토론4. 인권관련 기관 _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인권위원회)
17:10-17:30	종합토론	



심 포 지 엄
주 제 발 표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유경춘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주제발표]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 유경춘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

들어가는 말

1. 가톨릭사회복지란 무엇인가?

1.1 사회복지의 개념

1.2 교회 정체성의 표현인 ‘가톨릭사회복지’

2. 인권이란 무엇인가?

2.1 인권의 정의

2.2 인권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2.1 인권의 근거

2.2.2 인권의 두 가지 지도원리

2.2.3 인권의 내용

2.2.4 독특한 강조점

2.2.5 인권수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3.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

3.1 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

3.2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실화를 소재로 한 ‘도가니’라는 소설과 영화가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해당 시설은 문을 닫았고, 과거에 죄를 범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건 관련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새삼스럽게 ‘사회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라 여겼던 인권과 사회복지라는 두 주제의 ‘결합’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당사자와 주변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언젠가 교계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보기가 아주 어렵다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고해소가 대부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좁고, 게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진 고해틀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어디 그것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반 사회복지 또는 다른 종교기관에서 펼쳐는 사회복지활동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가톨릭만 인권을 말하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인권을 말하지 않는데 유독 가톨릭사회복지만이 인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권에 대하여 가톨릭사회복지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사회복지가 왜 인권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과 그것이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신자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인권의 일반적 개념과 인권을 가톨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신학적 성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주제가 둘 다 신학이나 교회의 울타리 안보다는 그 바깥에서 더 전문적이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전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을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저의 능력과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기만 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만 두 주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요점을 ‘초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들께서 여러분 계시니, 충분히 수정해주시고 보충해주시리라 위로를 삼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톨릭사회복지란 무엇인가?

1.1 사회복지의 개념

‘복지’(福祉, welfare)란 말은 어원적으로 ‘행복’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다 잘 갖추어져서 더할 나위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복지’를 일컫는 한자 ‘福祉’는 두 글자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의미하고(이점에서 ‘복지’란 말은 대단히 종교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welfare’는 ‘well’과 ‘fare’가 합쳐진 말인데, ‘well’은 ‘잘, 적절히, 훌륭하게’의 뜻이고 ‘fare’는 ‘가다, 여행하다, 살아가다 지내다, (일이) 되어가다’ 등의 뜻이니, 합하여 ‘잘 지내기, 잘 살기’ 따위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편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편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 해당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만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진정한 행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일 수 있다는 전제가 ‘사회’라는 수식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전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집단,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이러한 행복한 상태와 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민간이 정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사용되는 ‘사회복지’라는 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보다는 ‘가정’과 ‘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겨냥한 사회적 보호대책에 더 가깝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혹은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미혼모, 고아들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지켜주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경제제도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실직자, 파산자, 노숙자 등이 그들입니다. 그밖에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정



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를 사회복지로 이해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익숙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회복지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실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¹⁾

1.2 교회 정체성의 표현인 ‘가톨릭사회복지’

‘가톨릭사회복지’란 무엇입니까? ‘가톨릭사회복지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왜 인권을 말하는지를 알기 쉬울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말 앞에 ‘가톨릭’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²⁾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사회복지나 가톨릭사회복지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사회복지를 지속하는 의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톨릭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가톨릭신학과 가톨릭신앙체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사회복지는 스스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신앙체계와 신학체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가 지속되어야하는 당위성의 근거는 가톨릭사회복지가 가톨릭신앙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와 사회교리를 전공한 윤리신학자 힐퍼트 교수(Konrad Hilpert)가 제시한 네 가지 요점을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요소를 덧붙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³⁾

- 1) 참조: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개정판, 학현사, 2012, 77~104쪽; 장인협,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2, 1~10쪽; 유광호, 『사회보장발달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유풍, 2005, 248~249쪽.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나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고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 2)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 등과 같이 종교적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고, 미국사회복지, 일본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등과 같이 국가적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3) Cf. Konrad Hilpert, *Caritas und Sozialethik: Elemente einer theologischen Ethik des Helfens*, Schoeningh,



(이웃사랑의 실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사랑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마르 12, 28-34).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랑실천의 대상인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카 10, 25-37)에서 바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마태오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은 ‘곤경에 처해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바로 가톨릭사회복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사성 실현) 교회의 가장 내밀한 존재의미와 핵심의무는 이 세상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려주고 그분의 구원활동을 세상에서 지속하는 구체적인 “상징과 도구”(Zeichen und Werkzeu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결정적 본질은 곧 세상을 위한 성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사가 다 그렇듯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려면 교회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바를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 스스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는 장애물(걸림돌, 스캔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성사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교회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협의 요소들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짐을 나누어해주는 헌신을 통해서 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사회복지는 교회가 지나는 세상을 위한 성사로서의 본질을 실현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1997, S. 27-32; Richard Vökl, “Caritas”, *Lexikon der Pastoraltheologie*, Hg. v. F. Klostermann, K. Rahner, H. Schild, Herder, S. 79-83; Richard Vökl, *Diakonie und Caritas in den Dokumenten der deutschsprachigen Synoden*, Freiburg, 1977, S. 16-43; Handreichung für den pastoralen Dienst, *Caritas und Diakonie*, Matthias-Grünwald-Verlag, Mainz, 1974, S. 7-26.



(**평등의 실현과 나눔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인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추구한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3, 28)라고 사도 바오로는 강조했습니다. 그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타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콜로3, 11).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기에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가 가진 소유물을 기꺼이 공동소유로 내놓았고(사도 4, 32-35), 곤경에 처한 공동체를 위하여 모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사도 11, 27-30).⁴⁾ 인간적 사회적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가톨릭사회복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강자가 약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나 자선과는 다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느님께서 몸소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늘 쇄신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선포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바가 자신의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 14-26)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가톨릭사회복지는 교회가 선포하고 거행하는 바가 진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⁵⁾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부속

4) 물론 모든 이가 언제나 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형제자매’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바오로가 코린토 1서 11장에서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혹독하게 꾸짖는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에 먼저 배불리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오로는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1코린11, 22)라고 질책합니다(야고 2, 6 참조).

5) Vgl. Hermann Steinkamp, *Diakonie, Kennzeichen der Gemeinde*, Lambertus, 1985, S. 18-23.



기능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반드시 부여되는 의무사항이고⁶⁾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척도가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줍니다.

(조직화된 이웃사랑) 가톨릭교회가 그 ‘이웃’을 돌보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각자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향시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명령에 응답하는 모습이 바로 ‘사회복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지는 이웃사랑의 조직화된 형태입니다.⁷⁾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는 이웃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당과 교구에서 각각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사회복지분과나 빈첸시오회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화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인치료’ 보다는 ‘증상치료’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 사회복지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는 사회복지국) 서울대교구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사회사목부 전체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는 단순히 ‘사회’를 대상으로 사목을 하거나 ‘사회적 사목’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서울대교구 신자들에게 교회공동체의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동시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자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게 해주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

6) ‘교회 사회복지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참조: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사회복지음화, 제23항.

7) 물론 이러한 ‘조직화된 형태’가 오히려 신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복지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의 사명은 잊은 채 사회적 무감각에 안주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Vgl. Annette Schavan, “Caritas und Kirche”, in: *Not sehen und handeln: Caritas*, Hg. v. Hellmut Puschmann, Lambertus, 1996, S. 183; Markus Lehner, *Caritas Die Soziale Arbeit der Kirche: Eine Theoriegeschichte*, Lambertus, Freiburg im Breisgau, 1997, S. 9;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가.



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활동의 대상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서울대교구 시노드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가족 문제의 피해자들, 출소자와 재소자, 행려인, 약물중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외국인 매매춘 여성, 에이즈 환자, 호스피스 환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⁸⁾ 여기에 열거된 분야의 사람들을 돌보는 서울대교구의 사목조직으로 ‘노동사목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단중독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등을 즉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사목부 안에는 이들 조직 말고도 ‘빈민사목위원회’, ‘정의 평화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더 있고 물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오롯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톨릭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의 면면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는 교구 조직 안에서 ‘사회복지국’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⁹⁾

8)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사회복지음화, 제25항.

9) 그레야 무엇하는 부서인지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교구 내의 다른 부서와의 혼동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사목부’는 교구 사목국의 하위부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구 사목국’이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면 ‘사회사목부’를 통해서 그 신앙이 실천되고 꽃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사목부라는 명칭보다 ‘사회복지국’이라는 명칭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서울대교구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카리타스 서울’(Caritas Seoul)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의 영문표기도 ‘카리타스 서울’(Caritas Seoul)로 똑 같습니다. 사회사목부가 사회복지국이라는 점을 ‘Caritas Seoul’이라는 표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 인권이란 무엇인가?

2.1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는 태생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나 사회가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본성에 뿌리박은 원천적 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2. 16채택)도 전문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권: 서구 시민혁명의 결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인권이란 용어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인권의 태동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입니다. 10) 미국독립선언(1776)과 프랑스인권선언(1789)을 통해서 왕이나 귀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며, 양도불가한 자유의 권리 가진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사상적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인의 기본적 평등과 자유의 권리가 선언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혁명의 효력이 미치는 서구 유럽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사회권: 평등의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 시민혁명을 통하여 ‘만인의 평등이나 자유’가 선언된 것은 맞지만 혁명에 성공한 시민계급의 관심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때마침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본가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당한 계약에 자신의 노동력을 값싸게 팔아 생계

10) 인권발전의 역사에 관해서 참조: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사회복지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2008, 인간과복지, 35-52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인권교육길잡이』, 사람생각, 1999, 45-55쪽; 줄 문, “인권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누리와 말씀』, 제12호(2002. 12), 142-149쪽.



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로 내몰렸습니다. ‘만인의 평등’은 실제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습니다. 19세기 서구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노동자들이 빈곤과 착취로 나날을 보내야 했는지는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노동자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도 실질적으로 평등의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1891년 가톨릭교회가 반포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새로운 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은 훗날 ‘사회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국제화) 만인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존중이 서구 유럽에서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참혹하고 반인권적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UN)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무를 회원국들에게 부과하는 ‘유엔헌장’ (1945. 6. 26)을 제정하고 인권 촉진을 위한 유엔의 국제협력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초의 전 세계적 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이 제정된 것입니다. 도덕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UN 국제인권협약들이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사회권협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자유권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그것입니다.¹¹⁾

(인권의 단계적 발전) 자유권에 해당하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흔히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경제활동을 할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별, 종교,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도 제1세대 인권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에 담겨있습니다. ‘제2세

11) 이밖에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채택되었다.



대 인권'은 사회권이라 불리는 경제·사회적 권리를 말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과 '세계인권선언'(1948)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소개된 권리들이 바로 이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노동할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을 권리, 자유로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제3세대 인권'은 '집단적 권리'로서,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 등 건강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누릴 권리, 민족자결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주로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든 제3세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창된 것인데, 아직까지는 국제적 논의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¹²⁾

2.2 인권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근대인권사상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성경이나 신학적 성찰의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성경과 신학의 기본적 관심사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인권 문제에 관해서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¹³⁾ 결론부터 밝히면 인권 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교회 밖의 사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내용과 교회의 것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처음부터 사회와 보조를 같이 맞췄던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교회가 인권에 관해 사회와 같은 이해에 도달하기까지는 사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톨릭교회가 공식 교도권을 통해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언급한 인권 목록을 수용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요한 23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부터입니다.¹⁴⁾ 사회보다 15년이나 늦은 셈이지만, '가톨릭교회 최초의 인권선언'이라

12) 인권의 단계적 발전에 관해서 참조: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2011, 30-34쪽; 손병돈 외 공저,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28-29쪽; 줄문, "인권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누리와 말씀』, 제12호(2002. 12), 148-149쪽; 짐 아이프,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적 동향", 박영란 외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4, 인간과 복지, 19-22쪽.

13) 인권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관해 참조: 줄문, "인권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누리와 말씀』, 제12호(2002. 12), 150-166쪽.

14) 물론 전임 교황들도 인권을 말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 1937)에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강조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권리, 신체보전의 권리, 생존수단을 소유할 권리, 자신의 궁극목적으로 나아갈 권리, 집회결사의 권리, 사유재산의 소유와 이용의 권리 등입니다(제27항). 또한



할 만큼 폭넓은 인권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톨릭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칙에 제시된 인권목록들을 예를 들면, 생명보호와 신체보호의 권리,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들로서 보호받을 권리, 진리추구와 의사표현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 양심과 종교자유의 권리, 사유재산권리, 집회와 결사자유의 권리, 여가선용의 권리, 이주의 자유,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입니다(11~27항). 이로써 인권개념은 가톨릭사회교리에서 확고하고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공의회는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사목헌장 29항)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수호를 교회 자신의 의무와 사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¹⁵⁾

2.2.1 인권의 근거

(자연법적 논증)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타고난 권리’라는 점에서 교회와 사회의 이해가 일치합니다.¹⁶⁾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그 인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존중받을 만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 즉 인간의 존엄성도 교회와 사회의 공동의 확신입니다. 여기까지를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설명(논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이것만으로는 인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학적 설명(논증)을 추가합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 간직되어온 ‘인간 존엄성’을 처음으로 ‘인간의 권리’와 명시적으로 연결하여 가르쳤고, 성탄절라디오메시지(‘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관한 성탄메시지’ 1944. 12. 24)에서는 인간존엄성의 재건과 보호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처음으로 ‘하느님 모상성’과 ‘하느님 자녀성’으로부터 논증하였습니다. 참조: 졸문, “인권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누리와 말씀』, 제12호(2002. 12), 154쪽.

15)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힘으로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 권리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는 현대의 힘찬 움직임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사목헌장 41항).

16) 참조: 교황청정의·평화위원회, 『교회와 인권』, 1975, 제36항.



(인권의 근거: 창조신학적 논증) 인권의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¹⁷⁾ 인간존엄성의 근거는 창세기의 설명에서 찾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1, 26-27).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인간의 하느님 모상성)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간존엄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¹⁸⁾

(인권의 근거: 구원신학적 논증) 인간존엄성의 또 다른 신학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강생구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그분의 강생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사건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이 몸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실 만큼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¹⁹⁾

2.2.2 인권의 두 가지 지도원리

가톨릭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인권의 두 가지 본질적인 지도 원리를 사회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입니다.²⁰⁾ 인권이 시대나 장소 그리고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유효

17) 참조: 사목헌장 21항. 이런 설명에 따르면 결국 ‘인권’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18) 인권과 화해에 관한 주교시노드 메시지(1974)도 인간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 모상이고 하느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조: “인권과 화해에 관한 메시지, 제4차 세계주교대의원총회(1974.10.23)”, 『사목』, 37(1975), 116쪽. ‘하느님의 모상성’과 더불어 인간존엄성의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자녀성’(Gotteskindschaft)을 들 수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모두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강조는 구약보다 신약의 복음서들에서 더욱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 11-32)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된 하느님과의 ‘부-자’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존엄성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가려졌던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Cf. Georg Kraus, "Gotteskindschaft", in: *Lexikon der katholischen Dogmatik*, Hrsg. v. Wolfgang Beinert, Herder, 1987, 226-229.

19) 참조: 「사목헌장」, 제22항; 「인간의 구원자」, 제10항.

20)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제153, 154항.



하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고 동시에 남에게 ‘양도 할 수도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때때로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급하려는 입장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어떠한 예외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지지합니다.

인권의 또 다른 핵심적 특성은 인권이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인권적 가치를 위해서 다른 인권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권은 통째로 수호해야지 토막내어 구미에 맞는 것만 지킬 수 없다는 인권의 불가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점도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이 우선이므로 당장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2.2.3 인권의 내용

가톨릭교회는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선언의 모든 내용을 적극 찬성하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²¹⁾ 교회의 사회선포문헌 모두가 하나같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국제공동체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선포된 교회의 사회교리는 모두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옹호하고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이기 때문입니다.²²⁾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요한 23세의 회칙「지상의 평화」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사목헌장」, 그리고 ‘교황청정의평화위원회’에서 내놓은 문헌「교회와 인권」²³⁾을 중심으로 교회가 제시한 인권의 목록들을 대강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²⁴⁾

21) 참조:「세계정의」, 제58항.

22)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가톨릭사회교리’가 정립되는 토대이자 기초입니다. cf. Bernard F. Evans, *Lazarus at the Table: Catholics and Social Justice*, Liturgical Press, 2006, p. 11f.

23)「교회와 인권」도 레오13세를 비롯한 역대 교황들의 인권옹호 업적을 다시 정리하고 특히「지상의 평화」에서 보여준 교황 요한23세의 탁월한 안목을 높이 평가합니다. 참조: 교황청정의·평화위원회,「교회와 인권」, 분도출판사, 1976.

24) 아래의 목록에서는 다음의 약어를 사용합니다:「지상의 평화」= PT,「사목헌장」= GS,「교회와 인권」=CH,「노동하는 인간」= LE,「백주년」= CA.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경우 별도의 줄로 처리했습니다.



제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CH 37항)
- 인간기본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척, 여성 기본권의 보호필요성(GS 29항)
- 남자와 똑같은 평등권을 누릴 여성의 권리(CH 38항)
- 의식주와 연관된 생존의 절대적 권리(PT 11항)
-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다가설 권리(GS 26항; 참조 CH 37항)
- 경제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PT 18항)
- 자유로이 진리를 탐구할 권리(CH 37항)
- 진리탐구와 사상표현의 자유(PT 12항)
-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GS 73항, CH 37항)
- 공적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진상을 파악할 권리(PT 12항, CH 37항)
- 거짓없는 보도를 들을 권리(CH 37항, GS 26항)
- 소송절차상의 알 권리와 변호받을 권리(CH 37항)
-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라 행동할 권리(CH 37항, GS 26항)
- 무기사용을 거부할 양심의 권리(GS 79항)
- 하느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릴 권리(PT 14항, GS 26항)
- 하느님을 예배하고 사적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권리(CH 37항, GS 73항)
-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CH 37항, CA 47항)
-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CH 38항, PT 23항, GS 73항)
- 노동자의 단체결성권 및 자유로이 단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GS 68항)
- 사유재산권(PT21항, 민족들의 발전 23항)
-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충분한 몫의 재화를 가질 권리(GS 69항)
- 재산의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의 권리(GS 71항)
- 이주의 자유와 이민의 권리(PT 25항, CH 38항)
- 신분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PT 15항, CH 38항, GS 26항)
- 사제 또는 수도생활의 권리(CH 38항)



- 인격존중과 좋은 평판을 누릴 권리(PT12항, CH 37항, GS26항)
-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CH 37항, GS 26항)
-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CH 38항)
- 자녀를 낳을 부모의 권리와 자녀양육과 교육의 권리(CH 38항)
- 혼인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GS 87항)
-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부모들의 우선적인 권리(PT 17항, GS 52항)
- 가정을 이루고 책임있는 성생활로 자녀를 낳고 기를 권리(CA 47항)
- 일치된 가정에서 그리고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권리(CA 47항)
-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공동선 실현에 공헌할 권리(PT 26항)
- 공동선 증진을 위해 자유 투표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GS 75항)
- 자기 공동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능력대로 기여할 권리와 의무(GS 65항)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상반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노동할 여성의 권리(PT19항)
-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GS 67항)
- 물질적 재화를 올바르게 취득하여 자신과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할 권리(CA 47항)
- 합당한 노동의 조건하에서 일할 권리(CH 38항)
-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과정에 대한 권리(LE 19항)
- 노동자와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보수를 받을 권리(PT20항)
- 본인과 가족의 물질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생활을 위한 보수를 받을 권리(GS 67항)
- 자신과 그의 가족이 존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충분한 보수를 받을 권리(CH 38항)
- 실직 등 생존방법을 상실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PT11항)
- 실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LE 18항)
- 노동조합을 통한 협상과 파업의 권리(GS 68항)
- 최후수단으로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CH 38항)
-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GS 67항)
- 적당한 자유 시간을 갖고 필요한 휴양을 할 권리(CH 38항)



- 연금, 노후나 질병, 산재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LE 19항)
- 교육받을 권리, 문화적 혜택에 참여할 권리(PT13항)
- 인종·성별·국적·종교나 사회적 신분의 차별 없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인간적·시민적 문화에 대한 권리(GS 60항)
-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권리(CA 47항)
- 의사들의 치료와 정당한 사회적 봉사를 받을 권리(PT11항)
- 보호와 도움을 받을 노인·고아·병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권리(CH 38항)
- 문화혜택을 받을 천부적 권리, 기술 및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CH 38항),
- 교육과 도덕적으로 온당한 생활조건과 전달매체(홍보수단)에 접할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특별 권리(CH 38항)

제3세대 인권: 집단적 연대의 권리

- 자기나라의 인구문제에 관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GS 87항)
-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들의 발전에 대한 권리(CH 38항-14)
- 집단공동체들의 생존권·발전권 및 천연자원과 문명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CH 38항-16)
- 모든 민족이 자신의 민족주체성을 지킬 권리, 소수민족의 권리(CH 38항-17; 제32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²⁵⁾ 7~11항)
-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간추린사회교리 468항)
- 생태계에 대한 미래세대의 권리(2008년 세계평화의 날 교황 담화²⁶⁾)

2.2.4 독특한 강조점

(태아의 인권) 교회의 인권목록들도 대부분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이나 소위 자유권협약, 사회권 협약 같은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가톨릭교회만의 특별한 강조점을 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생명이 잉태된 후부터 모체 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25) 제32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9호(1999), 29-43쪽.

26)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세계평화의 날 담화(2008년 1월 1일),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2008년 37호), 15~24쪽.



권리’(CA 47항)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회에서 진행되는 인권에 대한 강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도 담보해줄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톨릭교회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인간이 임신된 순간의 태아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생명의 기본인권이 공공연히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률적·정치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²⁷⁾

(기업경영에 참여할 노동자의 권리) 일반사회의 인권 논의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권리를 들라고 하면 ‘기업경영에 참여할 노동자의 권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과 정도는 개별 기업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적어도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교황 요한 23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에 관한 노동자들의 소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²⁸⁾ 이에 대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그러므로 자본주, 고용주, 경영자, 노동자 등이 각자의 임무에 따라 활동 방향의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GS 68항)고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동시 강조)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에 비해 교회의 인권 교리에서는 인간의 의무에 대한 강조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으나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²⁹⁾ 하지만 교황 요한 23세의「지상의 평화」에는 ‘인간의 권리들’(11~27항)에 이어서 ‘인간의 의무들’(28~45항)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가분적인 상호 보완성”을 꿰뚫어본 교회가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³⁰⁾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의 인권이나 복지를 존중하고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의 인권과 복지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27) 참조:『가톨릭교회교리서』, 2270~2275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생명의 복음」, 44~45항; 제3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9호(1999), 31~32쪽.

28) 참조: 요한23세,「어머니요 스승」, 91~92항.

29) 세계인권선언 총30개 조항 중에서 제29조에만 의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기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30)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제156항.



없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가톨릭교회가 ‘공동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해온 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³¹⁾

(집단적 권리에 대한 강조) 집단적 권리를 인권의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입니다. 짧은 역사만큼 제3세대 인권에 관한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은 아직 미미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단적 권리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를 강조한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어머니요 스승」(150~174항)과「사목헌장」(85, 86, 88항), 민족들의 발전권리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민족들의 발전」(43~65항)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약소민족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의 발전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에 대한 원조와 공정한 통상관계 확립을 통해 인류전체의 공동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사회적 관심」도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 실업, 국제부채 등의 문제가 ‘반인권’(反人權)의 구조적 요인이고, 진정한 인간발전과 인권회복을 위해서는 소위 선진국들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1월 1일의 ‘제32차 세계평화의날 담화문’에서도 극도의 빈곤은 완전한 인권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사회경제적 집단적 인권개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극빈국들의 심각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내전 등으로 극심한 분쟁을 겪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주문하였습니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반포한 회칙「진리안의 사랑」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저개발국가의 발전권리를 취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가진 편이 먼저 나누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³²⁾

2.2.5 인권수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예수님의 복음선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상생활을 살펴보면, 그분의 활동은 인간을

31) 참조:「팔십주년」, 23항;「간추린 사회교리」, 제158항.

32)「진리안의 사랑」에서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무상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gratuitousness)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진리안의 사랑」, 38항, 39항.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억눌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설교도 가난한 사람, 묶인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루카 4, 16-21).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CH 56항).

(인권수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인 교회도 ‘사부’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그분의 교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 주며”(루카 4, 18 참조),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 10)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³³⁾

이처럼 교회는 고통 받는 사람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³⁴⁾ 그리고 인용구의 마지막 구절은 교회가 바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의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연설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무와 노력에서 제삼자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고통 받는 사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으며(마태 25, 31-45 참조), 인간이 고통을

33)「교회헌장」, 제8항.

34) 참조:「세계정의」, 제35항.



겪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옆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³⁵⁾ 따라서 그들이 고통 당하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유린되는 것입니다.³⁶⁾ 그런 점에서 인권수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인권신장을 위한 투신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에 해당합니다.³⁷⁾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직면하여 교회의 투신은 ‘인권의 그리스도교적 근거 선포와 인권 침해에 대한 단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³⁸⁾ 적극적 차원에서의 선포행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모범을 교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단죄는 불의에 대한 양심적 고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35) Giovanni Paolo II, “La Chiesa nel mondo contemporaneo in difesa della dignità di ogni uomo”, Al Sacro Collegio durante l'udienza per gli auguri, 30 gennaio 1979, in: Giovanni Paolo II,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Città del Vaticano, 1978-1989, 1979/II, p.273, 이동익, 『인간, 교회의 길: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교리』, 성바오로, 1998, 279쪽에서 재인용.

36) 참조: 『사목헌장』, 제27항.

37)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제159항. “교회의 인권 옹호는 복음 메시지의 정신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교회 사명의 불가피한 요구이다”(『교회와 인권』, 제44항). 그런데 현재 이것이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사목활동이 ‘특수사목’으로 불리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가톨릭 사회복지’라고 하면 신자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38) 다양한 인권침해로 인한 불의들에 관해 참조: 『세계정의』, 제19~24항; 『간추린 사회교리』, 제159항.



3.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전에, 우리는 이미 ‘사회복지’가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1 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

‘사회복지’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적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존엄성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도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인권실현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사회복지의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인권의 내재적 가치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³⁹⁾ 사회복지와 인권주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오스트레일리아의 짐 아이프(Jim Ife) 교수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의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핵심이 인권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복지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인권운동가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인권은 곧 사회복지이며 인간의 복지가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39) 참조: 손병돈 외 공저,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24, 37쪽;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2011, 63, 72-73쪽.

40) 짐 아이프,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적 동향”, 박영란 외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²2004, 인간과 복지, 28쪽.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에 의해 차별당하고,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복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궁핍 속에 시달린다면,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노예와 같은 노동에 예속된 생활을 하거나 필수적인 휴식과 여가조차 누릴 수 없다면, 거기서 어떻게 복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회복지지는 인권과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2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은 내용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와 매우 밀접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사회권 전체를 ‘사회복지권리’라고 정의해도 될 정도입니다.⁴¹⁾ 집단적 연대의 권리인 제3세대 인권도 지역사회복지나 지역사회개발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⁴²⁾ 이와 같이 볼 때, 사회복지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동시에 인권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⁴³⁾

3.2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

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가톨릭사회복지만이 인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사회복지만의 무슨 특별한 점은 있을까요?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일까요?

(**사회복지와의 연속성**) 가톨릭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기본 속성 때문에, 가톨릭사회복지도 인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실천 영역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목도하므로, 가톨릭사회복지도 자연스럽게 인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 41) 참조: 손병돈 외 공저,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30-31쪽, 41-43쪽;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2011, 78쪽.
 42) 참조: 짐아이프, “사회복지와 인권의 세계적 동향”, 박영란 외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²2004, 인간과 복지, 27쪽; 손병돈 외 공저,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43쪽.
 43) 참조: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사회복지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2008, 324쪽; 이순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305쪽.



(이웃=사회적약자=예수) 가톨릭사회복지가 이웃사랑의 실천기체인데, 이때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이웃은 바로 ‘착한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루카 10, 25-37)처럼,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마태 25, 35-36)와 같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는 인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하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완수를 위한 필수조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을 세상에서 지속하는 ‘성사’이자 도구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교회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로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교회도 인간의 해방과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투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의 이행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가톨릭사회복지인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 본질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을 말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사회복지의 차별철폐활동, 인권 없이 불가능) 교회는 초창기부터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한 식구로 보았습니다(갈라 3, 26-28; I코린 12, 13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평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자들은 가진 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내놓은 재물이 자연스럽게 없는 이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⁴⁴⁾ 이러한 전통이 가톨릭사회복지 실천의 정신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가 ‘사랑의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나눔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인간들 사이의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44)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심지어 이웃을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기라’고 까지 말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 이웃과 자신과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말고, 그를 ‘자기 자신’으로 여겨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가난한 라자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저 부자를 닮아서는 안된다”(「사목헌장」, 제27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가톨릭사회복지에 관해 참조: Joseph Becker, “Die Caritas in den Dokumenten des II. Vaticanums”, in: *Handbuch der Caritasarbeit*, Verlag Bonifatius-Druckerei Paderborn, S. 190-194.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으로)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따른 사랑실천의 구체적 활동이 가톨릭사회복지입니다. 또한 그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의 형태가 바로 가톨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사회복지의 인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고통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라는 것도 결국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도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이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⁴⁵⁾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의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만큼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인권옹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5) 참조: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사회복지문화, 제23항.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에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 교회의 노력이 마치 사회적 약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향하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회의 우선적 투신이 더 절박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조: 『사회적 관심』, 제42항.



나가는 말

사회복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고 인권을 지키는 한 방편이라면, 가톨릭사회복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점이 다른가를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권을 지키고 신장시킨다는 점에서는 가톨릭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 활동에 비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권이 가톨릭교회나 가톨릭사회복지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사회복지가 강조하는 인권의 의미는 다분히 ‘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인권을 말하는데, 그 인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톨릭사회복지는 아주 극단적이고 심지어 과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 그가 사회적 약자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보통사람이든 모두 대상이지만, 그러나 특히 사회적 약자라면 가장 확실히 - ‘타인’ 또는 ‘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가 처한 고통을 나누어지려는 행동은 정확히 표현하면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 문제’이고 ‘나의 인권’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지 않고, ‘나눔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는 줍니다. 그래서 주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이라고 정의내리지 않고 바로 ‘또 다른 나’라고 정의내리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그저 나눌 뿐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활동에서 우리가 인권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우리자신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고 신학적 결론입니다.⁴⁶⁾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현재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됩니다. 이쯤 되면, 가톨릭사회복지는 결코 인권(人權)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神權)을 말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주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신학’이고 ‘이상’(理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실천과 사목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이론과 실천 간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간격의 크기는 공동체마다 또는 기관이나 개인마다 모두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

46) 참조: 1코린 12, 12-31; 로마 12, 3-8.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구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는 명칭은 아주 탁월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는 신학적 성찰이 담긴 말입니다.



나는 우리들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교구차원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가 또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전 교구민들의 신앙적 실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교구민의 관심과 에너지가 이곳에 모아지고 다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목구조가 정착되어야 사회사목부가 우리 신앙과 사목의 ‘꽃’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심 포 지 엄
주 제 발 표

가톨릭사회복지 인권기반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2]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사회복지, 인권 기반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미옥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 차]

1. 왜 인권기반실천인가?
2. 인권기반실천에 대한 이해
3. 연구방법
4. 가톨릭사회복지의 인권기반실천 현황
5. 어떻게 인권기반실천을 할 것인가?



1. 왜 인권기반실천인가?

가톨릭사회복지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문제를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사목적 지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른 교회 공동체의 작간접적인 행위와 신자 개인의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을 실천하려는 다양한 노력’ 혹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된다(심홍보, 2000:644). 가톨릭사회복지를 표방하는 경우, ‘교계제도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조직적 통일성과 공신력이라는 측면에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의 속성상 교회의 접근방법을 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용인될 가능성이 낮아 실제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박문수, 2009).

가톨릭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등록단체는 수탁시설 53개소, 직영시설 50개소, 등록단체 142개소로 총 245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 분야역시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숙인, 노인, 의료, 종합복지, 자활, 푸드마켓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인권기반실천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이다. 이 법인은 우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한다’라는 미션(mission)을 기초로,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여사회가 연대하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핵심가치(core value)로서,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책무성, 전문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이념적 출발로 삼고 있는 인권기반실천접근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가톨릭사회복지는 인권기반실천을 위한 유리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회복지지는 대표적인 인권관련 학문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의 역사 그 자체가 인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었고, 이는 다른 말로 인권기반실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인권이 다시 뜨거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최근의 몇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김미옥, 2012, 재인용). 첫째, 인권 혹은 권리의 이슈



가 마스크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다수가 알게 되었고, 이는 인권이나 권리의 보장이 침해받는 자로서의 소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한 기본장치 중 하나로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그 효과 뿐 아니라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권리 실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권항목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기관들은 그 이념적 근간이 무엇이든간에 인권관련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적 여건 안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사회복지학 내외 부적으로도 권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관찰된다. 예컨대, 전문가로부터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 소비자와 시민권의 강조, 임파워먼트와 파트너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권리나 참여의 이슈들, 이용자와 전문가의 불평등한 힘의 이슈들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최근 이것이 재부상하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회복지학 내부보다는 사회외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도가니 영화나 탈북자의 이슈들이 연일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이슈들이 제기된 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와의 연대⁴⁷⁾는 사회복지 안에서 인권관점을 보다 강조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 실천가는 ‘인권관점을 가지고 돕는 것은 무엇인가?’에 보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은 더 이상 거시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에 나타나야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새삼 재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기반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존엄성 옹호,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 사회적 연대(Solidarity), 공동선의 증진, 사회정의로 구성되어 있다(유영준, 2010). 교리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톨릭사회복지의 교리 그 자체에 이미 인권의 이념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7)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짐 라이프(Jim Ife)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기반실천이 지금까지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추구해 온 이념적 지향 중 하나였음을 전제하며, 현재 가톨릭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실천가들의 인권관련 활동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권기반실천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둘째,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관련의식 및 실행도 등 인권기반실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사회복지회가 향후 인권기반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및 교육, 조직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비록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기관들의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나, 다양한 영역의 대상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기반실천 관련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권기반실천에 대한 이해⁴⁸⁾

1) 인권 및 관련 개념

인권은 권리, 권익, 권리옹호 등 다양한 용어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인권의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사회정의, 윤리, 옹호 등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 개념으로서 사회정의, 윤리, 옹호 등과의 관계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인권(human rights)은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오혜경, 2008), 도덕작가치론적 차원에서부터 법, 제도, 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손병돈, 2008). 따라서 인권은 자연적 관점 또는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도덕작가치적 측면을 중시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 제도와 법의 형태성으로 드러난다. 인권은 역사적 발전단계를 기준하여 <표 1>과 같이 3세대로 구분된다(Ife, 2001).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1세대 권리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2세대 권리로, 3세대 권리는

48) 인권기반실천에 관한 이해는 김미옥(2006; 2011; 2012)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집합적 권리로 범주화한다. 제1세대 인권은 소극적 권리로서의 자유권을, 제2세대 인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을, 제3세대 인권은 아직까지 국제인권규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경제개발권, 환경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로 간주된다. 하지만 점차로 이러한 3단계 모델을 넘어서 인권을 7개의 범주, 즉 생존, 시민정치, 문화, 경제, 사회, 환경 및 영적 권리로 세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Ife and Fiske, 2006).

<표 1>은 인권의 3세대 발전과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은 자연법적 정의로서 천부인권설과 같이 전시대 및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갖는 동시에 시대와 역사,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인도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할 때 하나의 대안적인 도덕적 준거점을 제공해 주면서도(Ife, 2001:18), 정치 사회적 변화 및 제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는 권리로서 각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준다.

반면, 권익옹호는 인권을 구현 혹은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혹은 기술로서 의미를 갖는다. Mickelson(1995)은 옹호란 사회정의를 이룩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방침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로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힘을 갖도록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Barker(1995) 역시 직접 개입이나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았다(전선영, 2004 재인용). 따라서 옹호는 임파워먼트의 한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존의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거나 부적절한 혹은 존재하지 않은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장인협·우국희, 2001). 또한 인권을 논의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권기반실천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인권의 속성 중 하나인 도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김미옥 외, 2011). 이 외에도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임파워먼트는 결국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서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실천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표 1〉 인권의 3세대 발전과 사회복지

	1세대 발전	2세대 발전	3세대 발전
명칭	시민적·정치적인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연대적인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발전 학문 (development studies); 환경 보존의 이데올로기
실례(예)	투표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고문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법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자유	교육권, 주택권, 건강권, 직업권, 적절한 소득권, 사회보장권 등	경제적인 성장과 번창의 권리,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익,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
기관	법률 상담소,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감시 단체, 난민 노동 (refugee work)	복지정권, 제 3섹터, 민간 시장 복지(private market welfare)	경제발전기관, 지역 프로젝트, 그린피스
주요한 것	법률	사회복지	지역발전
전문적인 사회복지	옹호 : 난민 노동, 난민 보호소 (asylum seekers) : 교도소 개혁	직접적인 서비스 : 복지정권의 관리 : 정책발전과 옹호 : 조사	지역발전: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적, 영적인

사회정의는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하나의 가치였다. 즉,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혹은 사회정의 대 개인보호)’라는 이케도 접근은 항상 긴장관계 속에서 공존해왔다. 학자들은 이들 두 가치의 통합을 주장하거나(Lynn, 1999: Haynes, 1998) 선택을 강조(Abramovitz, 1998: 김인숙, 2004 재 인용)하였으며, 그 입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예컨대, 개인보호(개인치료)는 클라이언트를 병리화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위험이 있고, 사회정의(사회개혁)는 개인적 희망이나 두려움, 기대 등을 주변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Lynn, 1999). 이러한 이케도 접근은 여전히 논쟁중이며,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맥락 안에서 그 우위가 결정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복지사연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계는 세계화, 국가내외의 불평등 구조의 심화 등 21세기가 직면한 초국가적 현상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정의에 사회정의적 미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지향 가치 역시 인권과 사회정의, 임파워먼트, 인간의 해방 등이 강조되고 있다(김인숙, 2004). 그러나 아직 국내 사회복지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자는 이제는 사회정의인가 개인보호인가라는 이케도로부터 이 양자의 통합



혹은 재구조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인권관점은 이러한 양자의 긍정적 통합에 유용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기반실천의 개념 및 특성

인권관점은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철학이면서 수면위로 등장하지 않고, 실천에 내재해 있는 특성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 사회정의 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러한 권리기반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인권기반실천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인권과 사회복지의 둘 다 기본적으로 도덕적·가치적 차원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사회복지의 인격과 권리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인권은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윤리,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인권은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정당성을 구현하고 동기를 강화한다(이혜원, 2005). 특히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인권 유형은 2세대 인권, 즉 복지권, 노동권, 교육권, 가정형성 및 보호권, 문화권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권으로 인식된다(이석준, 2003). 사회복지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노력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사회복지활동은 제2세대 인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가인 동시에 인권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손병돈, 2008). 실제로 국제사회복지사협회,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사회복지전문직이 인권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기덕, 2007:50).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에는 인권관점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 인권관점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권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인권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권리중심 실천과 기존 사회복지실천과의 미묘한 차이도 지적된다. Ife(2006)는 권리중심의 사회복지관점(rights based perspective)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중심 접근(needs-based approach)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중심의 관점과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인권규약과 조약, 전통 등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적극적인 옹호나 권리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촉구, 연대 등의 활동이 특히 강조된다. 이는 인권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그들이 ‘수동적 시민권’에서 ‘적극적 시민권’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Kim, 2010).

그러나 Healy(2008)나 Drewett(1999)는 Ife와 달리 욕구와 권리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권리와 욕구가 서로 분할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음식, 피난처, 건강에 대한 돌봄이 없는 시민권은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어렵고, 시민권과 정치권의 억압은 영양섭취에도 해를 끼치는 등 욕구와 권리가 실생활에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인권관점이나 욕구충족 측면에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화시켜 나가며 인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인권적 요소의 강화를 위해 이용자의 참여, 협력적 관계, 권리에 대한 옹호가 보다 강조된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의 형태를 규명해 내기는 어렵다. 인권은 선언적 권리규정이므로 이용자의 실생활에 전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오혜경, 2008). 그러나 인권기반실천은 국내에서는 이미 일정 정도 정형화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을 보인다. 예컨대, ‘권리중심 실천’의 용어와 내용은 이미 교재에 사용되고 있으나(권진숙·김정잔·전석균·성준모, 2009:403-405) 그 내용은 전적으로 Ife(2006)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논쟁적 수용은 아직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인권 개념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권리 강조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인권 개념의 논의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영중(2006)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상적 개념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협력적 관계’라는 개념은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최종 판단을 누가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Beckett and Maynard, 2005; 김기덕, 2008 재인용).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나 인권기반실천을 연구한 김미옥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인권관점실천이 조직적인 정비과정, 예컨대,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 기관자체적인



인권규정 제정,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등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기반실천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강조되는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나와 같은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용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기관의 틀을 넘어 이용자의 개별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권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증진, 종사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 인권기반실천의 질적 향상 등이 그 성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합의가 어려울 때 이용자의 자기결정존중 만이 답인 것인지, 종사자의 권리는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인권기반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기관내 조직적 이슈와 맞물려있으면서도 그 안의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이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한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 차원의 인권기반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기관 조직구조의 변화, 자체적인 조직문화의 구성 그리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관련 교육 등이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등록된 252개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회수된 총 417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총 413부를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의 인권기반실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첫째, 인권관련변인들을 알아보고자 공감, 옹호, 전문성, 소진, 실

천유형과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척도들을 활용한 것은, 현재 인권기반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권과 관련된 개념들을 기초로 개발된 척도들을 활용하여, 인권기반실천 정도를 유추하고자 함이다. 둘째, 인권교육 및 인권기반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관련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역시 척도가 없어서, 본 연구자가 관련 질문을 구성한 후 조사하였으며, 이는 향후 인권교육 등과 관련된 방향 등을 제시할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서비스과정에서의 권리에 관한 실천기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알아보고자 서비스과정에서의 권리를 제시한 문항을 기초로, 척도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실천기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실천하는 실행도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게 함으로써, 향후 강화되어야 할 지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관련활동 조사

① 공감

본 연구에서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 타인의 처지에 대한 관심, 또는 타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의 체험으로 정의한다(전병성, 2003). 공감은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지공감은 공감적 정서 또는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 즉 타인의 감정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전병성(2003)의 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Mehrabian and Epstein(1972)의 정서공감척도, Davis(1980)가 제작한 IRI검사,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1994)가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것이다. 이 도구는 인지공감(1~15번)과, 정서공감(16~30번) 두 개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공감은 관점취하기, 상상하기로 정서공감은 타지지향적 공감적 각성과 개인적 고통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4, 8, 12, 18, 22, 27번)은 역환산하였으며 30점에서 150점 까지 점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54로 나타났다.



② 옹호

본 연구에서 옹호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의미한다(전선영, 2004) 본 연구에서는 옹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선영(2004)의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적 차원의 정책옹호(5문항)와 중간·미시적 차원의 계층 및 사례옹호(5문항)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번 문항(계층 및 사례옹호 문항)이 내적일치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9점에서 45점까지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옹호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00으로 나타났다.

③ 전문성

본 연구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송근원(2000)과 최인섭(2000)이 사용하고, 이를 권중돈(2002)의 연구에서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에서 25점까지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82이다.

④ 소진

본 연구에서 소진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정서적 압박감을 받음으로서 겪는 심리적 고갈상태를 말한다.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and Jackson(1981), 노은정(1995), 윤혜미(1991) 등의 소진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중돈(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문항(9, 10, 11, 12번)을 역환산하였다. 12점에서 6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28이다.



⑤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은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지적 개입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기수, 2006).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Rothman and Smith(1996), 이윤화(1999), Myers and Thyer(1997)의 연구결과와 측정도구를 변형하여 권중돈(2002)이 12개 항목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번과 11번 문항의 내적일치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점에서 5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지적 실천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674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은 ‘평균점수 \pm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평균에서 표준편차 이상의 집단을 반영적 실천유형, 평균 \pm 표준편차에 속하는 집단을 절충적 실천유형 그리고 평균에서 표준편차 이하의 집단을 결정적 실천유형으로 하였다.

(2) 인권교육관련 조사

인권교육관련 변수는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간 인권교육 빈도, 연간 인권교육 시간,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중복응답), 인권교육의 내용(중복응답) 그리고 인권교육이 인권기반실천에 도움이 된 정도, 인권기반실천에 관해 들어본 유무와 장소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의 중요도와 실행도 조사

실천가가 인식하는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미옥(2008)과 김기수(2006)의 이용자 권리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이를 5점 척도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각 항목들은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 영역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도의 측정은 ‘서비스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실행도는 동일한 항목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행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거의 실행하지 않는다’에서 ‘많이 실행한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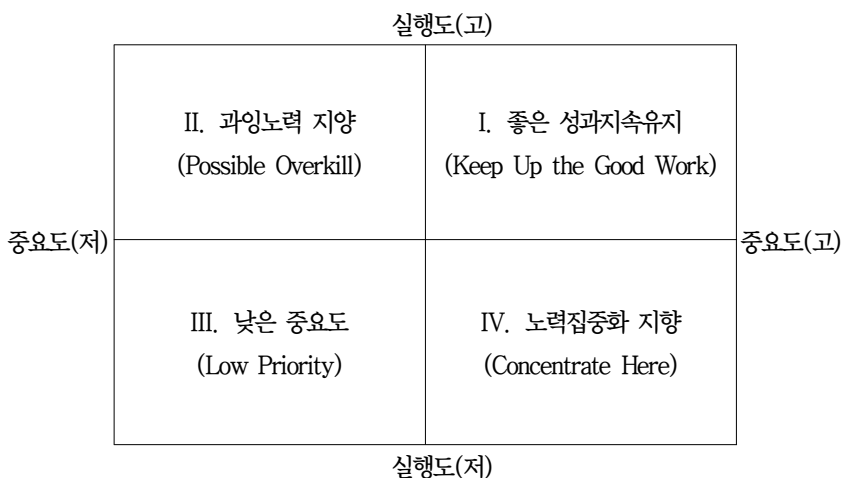


는 각 항목에서 실천가들이 인식하는 항목들의 중요도와 실제 실행사이의 간극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 기관, 인권 관련 변수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 19.0을 사용하였다.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권리영역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실행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활용하였다. IPA는 응답자들의 중요도와 성취도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평가속성들을 2차원 도면상에 각각 배치함으로 전략적 시사점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rtilla & Jarnes, 1977). IPA 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주요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는 평균값, 중앙값, 피어슨 상관계수, 스페어만 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평균값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1] IPA 매트릭스

자료: Martilla, J. & Jarn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4. 가톨릭사회복지의 인권기반실천 현황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28.7%, 여성이 71.3%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2.0%, 30대 29.0%, 40대 19.6%, 50대 18.1%로 고른 분포도를 보여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총 계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총 계	
성 별	남성	117 (28.7)	408 (100.0)	사회 복지 총경력	5년 미만	210 (55.7)	377 (100.0)	
	여성	291 (71.3)			5년 이상 ~10년 미만	122 (32.4)		
연 령	20대	129 (32.0)	10년 이상 ~15년 미만		28 (7.4)			
	30대	117 (29.0)	15년 이상 ~20년 미만		11 (2.9)			
	40대	79 (19.6)	20년 이상		6 (1.6)			
	50대	73 (18.1)	현직장 경력		5년 미만	311 (78.1)		398 (100.0)
	60대 이상	5 (1.2)		5년 이상 ~10년 미만	75 (18.8)			
		10년이상		12 (3.1)				
학 력	고졸	59 (14.6)	404 (100.0)	지위	일반사회복지사/실무자	191 (47.4)	403 (100.0)	
	전문대졸	54 (13.4)			주임(대리)/ 선임사회복지사	52 (12.9)		
	대졸	241 (59.7)			과장 혹은 부장(팀장포함)	55 (13.6)		
	대학원재학	10 (2.5)			대표자/관장	12 (3.0)		
	대학원 졸업 이상	40 (9.9)			기타	93 (23.1)		
종교	가톨릭	219 (54.3)	403 (100.0)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90 (23.4)
	기독교	94 (23.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49 (38.8)		
	불교	9 (2.2)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99 (25.8)		
	무교	78 (19.4)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7 (9.6)		
	기타	3 (.07)		300만원 이상		9 (2.2)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198 (47.9)	413 (100.0)					
	사회복지사2급	105 (25.4)						
	기타	110 (26.6)						



학력은 대졸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고졸 14.6%, 전문대졸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톨릭이 54.3%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23.3%, 무교 19.4% 등의 순이었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이 47.9%, 2급이 25.4%로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 등의 기타 자격증 소유자도 26.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관련 총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대 응답자가 다수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이상부터 10년 미만이 32.4%의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현직장 근무경력은 5년미만이 78.1%, 5년이상부터 10년 미만이 18.8%를 보여주었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분포는 일반사회복지사가 47.4%, 과장 혹은 부장이 13.6%, 주임 혹은 선임 사회복지사가 12.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월평균소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38.8%,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5.8% 이었다.

〈표 3〉 소속기관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유효백분율)	총 계
소속분야	아동·청소년	18(4.4)	407 (100.0)
	장애인	82(20.1)	
	노인	136(33.4)	
	여성	22(5.4)	
	노숙인	60(14.7)	
	종합복지	65(16.0)	
	의료복지	6(1.5)	
	기타	18(4.4)	
기관유형	거주시설	186(46.6)	399 (100.0)
	이용시설	186(16.6)	
	기타	27(6.8)	
소속기관 인권관련 자체규정	있음	289(75.1)	385 (100.0)
	없음	96(24.9)	

소속기관 특성 분포(표3)를 살펴보면, 노인분야 33.4%, 장애인 분야 20.1%, 종합복지관 16.0%, 노숙인 분야 14.7%, 아동·청소년분야가 4.4%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으로는 거주시설이 46.6%로 많았고, 이용시설은 16.6%로 분석되었다. 소속기관 인권관련 자체규정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5.1%, 없음이 24.9%인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기관들이 인권관



런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권관련활동 현황

사회복지사의 인권관련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인권 기반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공감은 평균 3.74(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에서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 타인의 처지에 대한 관심, 또는 타자의 복지를 향상 시키려는 정서적 반응의 체험이다(전병성, 2003). 이를 평균 총합으로 비교해보면, 최소값이 76점인데 반해, 최대값은 154점으로 응답자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공감은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지공감은 공감적 정서 또는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기제나 작용, 즉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3.68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정서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3.85로서, 인지공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인권관련활동 조사⁴⁹⁾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총합	평 균	표준 편차	총 계
공감	계	76	154	112.36	3.74	.315	413
	인지공감	35	66	51.59	3.68	.337	413
	정서공감	35	67	53.99	3.85	.383	413
옹호	계	9	45	27.17	3.01	.660	411
	정책옹호	5	25	13.50	2.70	.764	411
	계층 및 사례옹호	4	20	13.64	3.41	.664	412
전문성		10	25	18.86	3.77	5.14	409
소진		14	45	28.97	2.41	.516	409

49)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권관련변인들의 값이 달라지는 지를 분석해본 결과를 지면관계상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영역은 성, 연령, 결혼상태, 종교, 인권규정 유무에 따라 공감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은 40대와 5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옹호영역은 성, 연령, 학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경력, 지위, 월평균소득, 인권규정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중 경력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수록 옹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학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사회복지경력, 지위, 시설유형, 인권규정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용시설응답자가 거주시설에 비해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소진은 연령,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지위, 결혼상태, 시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위로는 중간관리자와 이용시설 직원의 소진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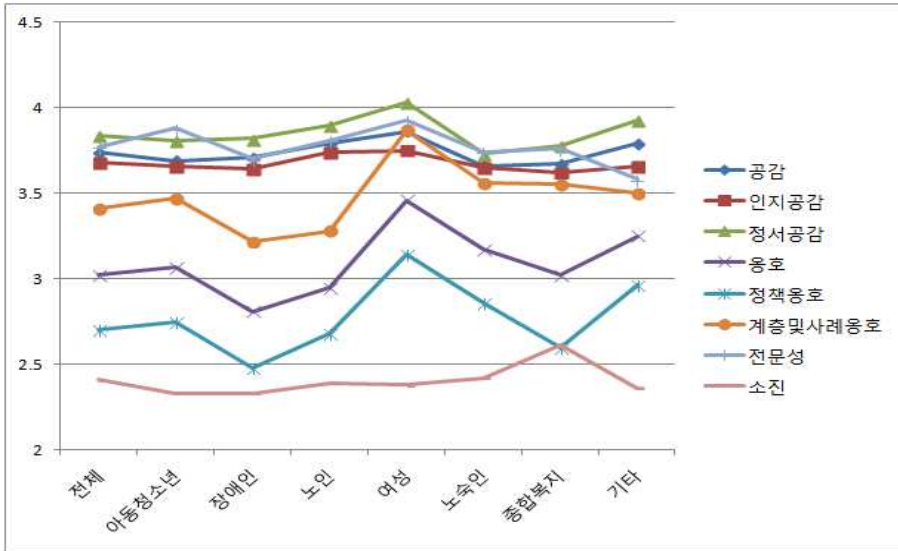
인권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서 측정되는 옹호는 평균 3.01(5점 만점)로, 보통 정도의 수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옹호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의미한다(전선영, 2004). 이를 다시 하위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거시적 차원의 정책옹호는 평균 2.70으로 나타났으며, 중간·미시적 차원의 계층 및 사례 옹호는 3.41로 나타나서 두 영역간 평균 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는 전문성의 평균은 3.77(5점 만점)으로 나타나서 보통 이상의 수치를 보여준다. 반면, 소진은 평균 2.41(5점 만점)로 비교적 소진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분야별로 인권관련변인들의 변수별 분포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공감영역에서는 시설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분야 종사자들의 공감도가 가장 높은 점수(3.86)로 나타났으며, 노숙인 관련분야가 3.66으로 가장 낮았다. 영역별로는 인지공감과 정서공감 모두 여성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였고, 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인지공감을, 노숙인 분야 종사자들이 낮은 정서공감을 보여주고 있다. 옹호와 관련해서는 역시 여성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높았으며(3.46), 장애인분야 종사자들이 2.81로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별로는 정책옹호 점수가 여성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3.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계층 및 사례 옹호는 3.0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계층 및 사례옹호 역시 여성이 가장 높고, 장애인 분야 종사자가 가장 낮았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분야 종사자들이 3.93으로 가장 높았고, 소진영역은 종합복지관 분야 종사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그러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50) 각 영역별 점수분포에 관한 표는 연구의 체계상 부록에 배치하였다.



[그림 2] 분야별 인권관련활동 분석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은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지적 개입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기수, 2006).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을 살펴본 결과(표 5), 절충적 실천유형이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결정적 실천유형 17.7%, 반영적 실천유형 1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7.7%가 아직 결정적 실천유형을 활용하고 있어, 지지적 개입전략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것이다.

<표 5>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

변인	구분	구분기준	빈도 (유효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총계
실천유형	결정적 실천유형	$X < 30.024$	72 (17.7)	28.15	2.335	408 (100.0)
	절충적 실천유형	$30.024 \leq X \leq 37.736$	271 (66.7)	34.10	1.988	
	반영적 실천유형	$37.736 < X$	63 (15.5)	39.50	1.77	

주1) 결정적 유형은 평균합(33.88)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3.856)보다 작은값을 가진 집단



주2) 절충적 유형은 평균합(33.88)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보다 작은값에서 1표준편차 큰 사이의 값을 가진 집단

주3) 반영적 유형은 평균합(33.88)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3.856)보다 큰값을 가진 집단

3) 인권교육 현황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있음이 63%, 없음이 37% 인 것으로 상당수의 실천가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148명을 기준으로 각 소속분야별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종합복지관이 32%, 노인 25.2%, 장애인 18.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이용시설이 63.9%로 거주시설 26.5%에 비해 인권교육을 최근 1년간 받지 못한 실천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유무

변 인		구 분	빈 도(유효 백분율)	총 계
인권교육유무		있음	252(63.0)	400
		없음	148(37.0)	(100.0)
인권 교육 받지못한 경우 (N=148)	소속 분야	아동·청소년	9(6.1)	147 (100.0)
		장애인	27(18.4)	
		노인	37(25.2)	
		여성	13(8.8)	
		노숙인	2(1.4)	
		종합복지	47(32.0)	
		의료복지	3(2.0)	
		기타	9(6.1)	
	기관 유형	거주시설	38(26.4)	144 (100.0)
		이용시설	92(63.9)	
		기타	14(9.7)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연간인권교육 빈도 및 시간을 질문한 결과, 최소 1회부터 최대 5회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연간 교육시간 역시 최소 30분부터 최대 14시간까지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교육시간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3시간~6시간이 43.4%로 가장 많았고, 3시간 미만인 36.7%, 6시간~9시간이 15.5%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실천가들은 연간 3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최근 1년간 인권교육 빈도 및 시간

변 인	최소값 (회/시간)	최대값 (회/시간)	평균 (회/시간)	표준 편차	총 계
인권교육빈도	1	5	1.55	.933	239
인권교육시간	0.5	14	3.98	2.459	226
	구 분		빈 도(유효백분율)		총 계
인권교육시간	3시간 미만		83(36.7)		226 (100.0)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98(43.4)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35(15.5)		
	9시간 이상		10(4.4)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출처로는 내부 직원교육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외 직원연수나 보수교육이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인권개념과 내용이 32.0%,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해 22.6%, 실천방법이 1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출처 및 내용

변인	구 분	빈 도(유효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인권교육 출 처 (복수응답)	대학/대학원	5(1.6)	(2.0)
	직장(내부 직원교육)	151(48.4)	(59.9)
	직원연수나 보수교육	97(31.1)	(38.5)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의 교육	55(17.6)	(21.8)
	기타	4(1.3)	(1.6)
계		312(100.0)	(123.8)
인권교육 내 용 (복수응답)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	171(32.0)	(68.4)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구제절차 등	92(17.2)	(36.8)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21(22.6)	(48.4)
	우리사회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동향 이해	43(8.0)	(17.2)
	인권존중의 태도와 옹호를 위한 실천방법	102(19.1)	(40.8)
	기타	5(1.1)	(2.4)
	계	535(100.0)	(214.0)

인권교육이 인권기반실천에 도움이 된 정도의 평균은 3.79(5점 만점)로 나타났으나, 표준



편차가 .799로 응답자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권교육이 인권기반실천에 도움이 된 정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 계
인권교육이 인권기반 실천에 도움 된 정도	1	5	3.79	.799	258

인권기반실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31.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68.8%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를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임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권기반실천과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이 미시적/실천적 차원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 제공시 인권관점의 주관적인 반영정도는 평균 3.90(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10〉 인권기반실천의 반영 정도

변 인	구 분	빈 도(유효백분율)		총 계	
인권기반 실천에 관하여 들어본 유무	예	120(31.2)		385	
	아니오	265(68.8)		(100.0)	
서비스 제공 시 인권관점의 주관적인 반영정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총 계
	1	5	3.90	.647	399

4)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영역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영역에 관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각 영역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치로서, 각 권리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실행하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선, 서비스 과정을 23개의 하



위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23개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가들이 생각하는 이용자 권리영역의 중요도와 실제 실행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도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4.66)’, ‘품위있고 존중할 사람으로 다루어질 권리(4.62)’, ‘비밀이 존중될 권리(4.60)’가 높은 수치를 보여준 반면,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권리(4.08)’, ‘종교를 가질 권리(4.0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천가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실제 실행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에 적합한 용어로 표현될 권리(4.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4.18)’,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4.17)’, ‘품위있고 존중할 사람으로 다루어질 권리(4.14)’, ‘비밀이 존중될 권리(4.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톨릭사회복지의 미션과 맞물려, 실천가들이 이러한 권리영역의 중요도 인식 못지않게 실행도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계획수립에 참여할 권리(3.52)’는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어, 실천가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특정한 식성 혹은 문화적 욕구에 적합한 음식 선택을 제공받을 권리(3.69)’로 실행정도가 낮은 권리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해보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지만,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 ‘품위있고 존중할 사람으로 다루어질 권리’, ‘비밀이 존중될 권리’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과 동시에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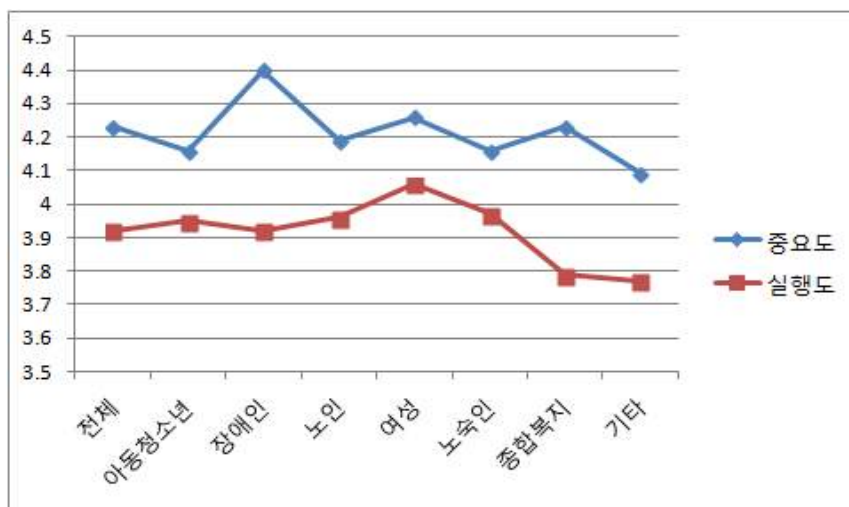
〈표 11〉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영역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 영역	중요도		실행도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서비스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	4.27	.697	3.52	.953	14.681	.000
2.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4.58	.708	4.07	.761	10.824	.000
3. 의견이 경청될 권리	4.50	.709	4.11	.704	8.828	.000
4. 건강에 관련된 케어를 받을 권리	4.50	.668	4.05	.877	10.840	.000
5.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59	.636	4.07	.826	11.490	.000
6.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59	.654	4.17	.813	10.276	.000
7. 종교를 가질 권리	4.09	.961	3.83	1.038	5.137	.000
8. 개인적 고유성(주체성)을 유지할 권리	4.42	.677	3.95	.782	12.331	.000
9.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권리	4.08	.918	3.55	1.053	10.070	.000
10. 품위 있고 존중할 사람으로 다루어질 권리	4.62	.669	4.14	.753	11.393	.000
11.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	4.66	.597	4.18	.691	12.572	.000
12. 투표할 권리	4.40	.853	3.87	1.164	8.705	.000
13. 정보에 접근할 권리	4.28	.804	3.72	.839	12.379	.000
14. 비밀이 존중될 권리	4.60	.661	4.14	.760	10.988	.000
15. 연령에 적합한 용어로 표현될 권리	4.41	.736	4.19	.737	6.005	.005
16. 특정한 식성 혹은 문화적 욕구에 적합한 음식 선택을 제공받을 권리	4.20	.851	3.69	.947	10.226	.000
17. 불평을 호소할 권리	4.37	.739	4.02	.802	8.507	.000
18. 의견을 개진할 권리	4.40	.696	3.97	.748	10.552	.000
19. 의견교환에 참여할 권리	4.38	.725	3.73	.983	11.546	.000
20. 대변자와 접촉할 권리	4.29	.802	3.70	1.010	10.808	.000
21. ‘아니다’ 라고 말할 권리	4.50	.693	4.04	.720	11.942	.000
22. 사회적인 삶의 권리	4.48	.700	3.93	.829	12.785	.000
23. 파트너 혹은 친구로서의 권리	4.29	.771	3.80	.877	11.586	.000
계	4.41	.561	3.92	.522	16.047	.000

서비스 분야별로 실천가들이 인식하는 서비스과정 권리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 분야별 평균치와 그 차이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분야별로 실천가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인식의 차이는



장애인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종합복지지역이었으며, 인식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노숙인과 여성분야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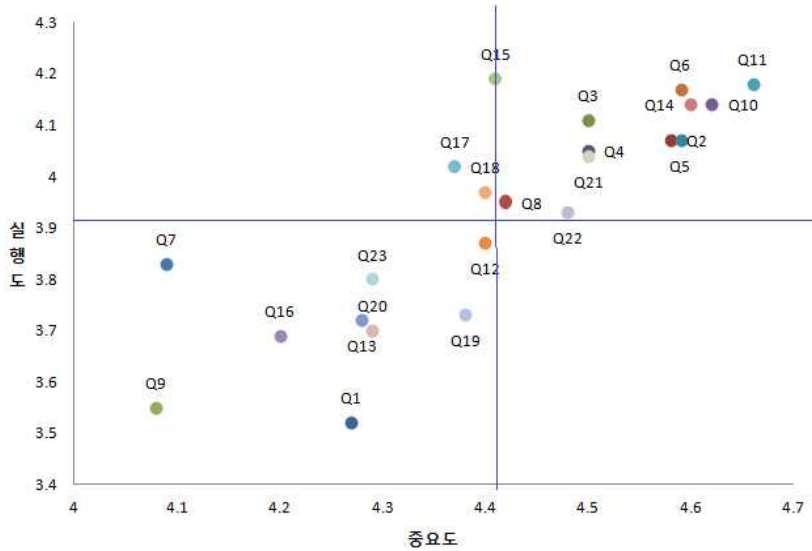


[그림 3]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분석

실천가가 인식하는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상대적인 분포도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이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원점으로 했을 때, 각 권리영역 평균치가 제시하는 상대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의 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51) 각 영역별 점수분포에 관한 표는 연구의 체계상 부록에 배치하였다.





[그림 4]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영역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포

〈그림 4〉를 기초로, 각 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우선 좋은 성과지속유지를 보여주는 제1사분면에서는 총 11항목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 제2사분면에는 불평호소와 의견개진의 2항목이 분포되었다. 낮은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제3사분면은 총 9개의 항목이 분포되었으며, 노력집중화경향을 보여야 하는 제4사분면은 하나의 항목도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서비스 과정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2〉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영역의 분포

구분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좋은 성과지속유지	과잉노력 지양	낮은 중요도	노력집중화경향
개념	상대적으로 이용자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도와 비교하여 실행을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높은영역)	이용자 참여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실행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중요도는 낮으나 실행도가 높은 영역)	다른 이용자 참여영역에 비해 낮은 중요도와 실행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아 더 노력해야 하는 영역
서비스과정에서의 권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생활보장 -의견경청 -건강케어 -정보제공 -안정된환경에서 생활 -개인적 고유성 유지 -품위있고 존중받을 사람 -충분한 존중 -비밀 존중 -아니다라고 말할 권리 -사회적 삶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평호소 -의견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계획수립참여 -종교 -재정관리 -투표 -정보접근 -음식선택 -의견교환참여 -대변자와 접촉 -파트너 혹은 친구 	-

사실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모두 중요한 것이므로, 응답자들이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제2사분면 및 낮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제3사분면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서, 이후 인권민감성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5. 어떻게 인권기반실천을 할 것인가?

이 연구는 가톨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반실천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실천 및 교육차원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공감영역의 평균이 3.74, 옹호 영역은 3.01로 나타나서, 공감에 비해 옹호와 관련된 실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전문성은 평균 3.77로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진은 2.4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실천 및 교육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권기반실천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재학습

인권관점으로 실천을 전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용자 중심의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용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용자 특성에 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이는 맥락 안에서 이용자를 이해하고, 개입하도록 하는 시작이 된다. 따라서, 많은 사회복지실천기술 중에서도 이용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competence)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기반실천은 한 사람을 ‘그가 서있는 그대로’ 존엄성을 인정하며,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제해결중심모델 중심의 개입으로부터 임파워먼트와 이용자참여모델⁵²⁾로 실천모델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인권기반실천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보수교육의 기회를 통한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강조되는 이론적 및 새로운 동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 이용자참여모델에 대해서는 김미옥(2012)의 원고를 참고하라



② 사색의 여유 혹은 반성적 성찰을 동반한 실천 지향

인권기반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실천이 진정 한 이용자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충분히 보장하며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실천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이른바, 느린 실천 혹은 반성적 성찰을 동반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업무는 이용자를 바라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실천가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과다한 행정업무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서류의 간소화 작업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다양한 인권교육 기회를 통한 인권관점실천 이해의 확장

‘알 수 없는 권리는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실천가가 아무리 인권기반실천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인권관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권기반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그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수 없다. 본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인권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37%에 달했고,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속 분야는 종합복지 32%, 노인 25.2%, 장애인 18.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도,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시간 미만이 36.7%, 3~6시간 미만이 4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권교육이 인권기반실천에 도움을 준 정도는 평균 3.79(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권민감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인권에 대한 기본교육 뿐 아니라 시설의 유형에 적합한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교육, 인권침해상황에서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교육, 인권기반실천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천가들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 학습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용자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기반실천은 인권관점으로 다시 이용자와 기관을 그리고 환경을 들여다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인권민감성은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동반되는 그 어떤 것이다. 이에 인권기반실천을 하다보면, 매우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철학과 윤리교육의 강화, 나아가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의 제공 등도 인권관점으로 이용자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실 인권기반실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용자를 수혜자로부터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표12) 실천가들은 이용자를 파트너로 보는 것을 낮은 중요도 영역으로 봄으로써,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모델 등 최근 제기되는 다수의 이론적 모델들에서 논의되는 바이지만, 실천은 진정 쉽지 않다. 오래된 관행으로 혹은 습관처럼 진행하던 자신의 실천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하며, 이용자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이 화려한 수사가 아닌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

⑤ 기관장에 관한 차별화된 인권교육

인권기반실천은 실천가 뿐 아니라 조직적, 법적 이슈들이 맞물리기도 하며, 이용자 자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의 인권민감성은 기관 전체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관점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인권관련교육이 필요하다.

2) 조직차원

인권관점실천을 위해서는 단순히 실천가 등의 인적 자원에 대한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지향할 필요가 있다.

①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물고기는 물에 젖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인권관점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 젖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현실로부터 문제들을 하나씩 도출해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하는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인권관련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고 기관 내에서 소규모 발표기회를 통해 서로의 학습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학습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장 적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 활용⁵³⁾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조직문화의 재구성: 성과와 효율성 강조로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최근 다수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운영을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바우처 방식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성을 더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문화는 과도하게 성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 실천을 간과하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조사 결과(표12), 실천가들은 개인적 고유성, 품위있고 존중받을 권리, 사회적 삶의 권리를 중요하면서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이 가톨릭사회복지의 미션 및 비전의 영향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조직문화로 귀착되도록 이용자중심실천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③ 기관의 자체적인 인권(혹은 윤리)관련규정의 제정

본 연구결과, 기관의 인권관련 규정은 이용자에 대한 공감 및 옹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규정을 기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인권관련활동에 종사자들을 노출시키고, 인권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아직 인권관련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다면, 기관차원의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④ 이용자 및 직원 인권위원회의 신설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인 차원에서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 법인 자체 내의 다양한 인권딜레마 사례들을 취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이용자 인권 못지않게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하다.

53)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 적용에 대해서는 김미옥(2009)의 연구를 참고하라



⑤ 인권기반실천딜레마 사례 연구

장기적으로 인권기반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기반실천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기반실천딜레마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어떠한 딜레마가 존재하는지 서로 이해하며, 딜레마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별, 예컨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인권딜레마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인권기반실천 유형 및 과정을 연구하여, 이를 각 현장에 바람직한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중돈. 2002. 사회복지사의 실천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의
권력·의존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논문집 41: 63-91.
- 권진숙·김정진·전석균·성준모. 2009.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공동체.
- 김기덕. 2007. 'A Critical Comparison Between Social Justice Perspective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ofession Within Changing Context', 한국사회
복지학회, pp 219-257
- _____. 2008.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pp.45-72.
- 김기수. 2006.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미옥·정진경·김희성·최영식·윤덕찬. 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_____. 김용득·윤덕찬·송남영·김고은, 2008.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_____. 정진경·김희성·조민성·배영미. 2009.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교재 개발-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용'. 보건복지부/세이브더칠드런
- _____. 2009.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
학, 61(3): 179-204
- _____. 김경희. 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29-55
- _____. 2012. '인권관점에서 본 한국사회복지실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영종. 2006. '사회복지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Jim Ife 초청 사회복지 분야 인권
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p.225-230.
- 김인숙. 2004.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33-53
- 노은정. 1995. 사회복지사의 Burnout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문수. 2009.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 논의의 맥락과 방향, 가톨릭사회복지포럼자료집



- 박성희. 1994.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병돈. 2008. '사회복지와 인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pp. 13-44.
- 송근원. 2000.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15: 41-72.
- 심홍보. 2000. 한국천주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 논총 제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 오혜경. 2008. '인권과 장애인복지실천'. 사회복지리뷰, 13: 27-57.
- 유영준. 2010. 기관의 사회복지인력양성의 방향과 과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료집
- 이석준. 2003.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적 의의와 과제', 피해자학 연구, 11(2): 131-165.
- 이윤화. 1999. 역량강화적 실천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적용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39: 113-125.
- 이혜원 역. 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장인협·우국희, 2001.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병성. 2003.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선영, 2004.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짐 아이프. 2006.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기회와 도전. 국가인권위원회 편. (Jim Ife 초청)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pp 3-43.
- 최인섭. 2000.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ckett, C. and Maynard, A. 2005. *Values & Ethics in Social Work*, Sage Publications.
- Brenda K. Bryant.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rewett, A. S. 1999. Social Rights and Disability: the language of 'rights' in community



- care policies. *Disability and Society* 14(1): 115-128.
- Haynes, K.S.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6): 501-509
- Healy, L. M. 2008. Exploring the History of Social Work as a Human Rights Profess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51(6): 735-748.
- Hyemee Yoon Lee. 1990. Social service worker's burnout and their work environment. Cornell University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Ife, J.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fe, J., and Fiske, L. 2006. Human Rights and Community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49(3): 297-308.
- Kim, H. S. 2010.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ustralian Social Work* 63(1): 103-116.
- Lynn, E. 1999. Value Bases in Social Work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9:939-953
- Maslach, C. and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 Martilla, J. & Jarn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13-17
- Mehrabian, A., and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yers, L., and Thyer, B. A., 1997. Should Social Work Clients Have the Right to Effective Treatment? *Social work* 42: 288-299.
- Rothman, J. and Smith, W.. 1996. Client Self-determination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Striking Balance, *Social Work* 41: 396-405.



[부 록] 시설분야별 인권관련 특성

1. 시설분야별 인권관련활동 차이

유형구분	N	공감		인지공감		정서공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청소년	18	3.69	0.284	3.66	0.211	3.81	0.443
장애인	82	3.71	0.302	3.64	0.298	3.82	0.299
노인	136	3.79	0.309	3.74	0.358	3.9	0.385
여성	22	3.86	0.29	3.75	0.328	4.03	0.396
노숙인	60	3.66	0.323	3.65	0.345	3.73	0.375
종합복지	65	3.67	0.332	3.62	0.376	3.78	0.399
기타	24	3.79	0.301	3.66	0.267	3.93	0.42
전체	407	3.74	0.315	3.68	0.338	3.84	0.381

유형구분	N	응호		정책응호		계층및사례응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청소년	18	3.07	0.743	2.75	0.866	3.47	0.727
장애인	82	2.81	0.729	2.48	0.84	3.22	0.688
노인	136	2.95	0.61	2.68	0.699	3.28	0.605
여성	22	3.46	0.779	3.14	0.798	3.87	0.858
노숙인	60	3.17	0.578	2.86	0.714	3.56	0.547
종합복지	65	3.02	0.53	2.6	0.683	3.55	0.495
기타	24	3.25	0.77	2.96	0.827	3.5	0.991
전체	407	3.02	0.661	2.7	0.763	3.41	0.666

유형구분	N	전문성		소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소년	18	3.88	0.505	2.33	0.423
장애인	82	3.7	0.479	2.33	0.618
노인	136	3.81	0.487	2.39	0.492
여성	22	3.93	0.58	2.38	0.464
노숙인	60	3.74	0.571	2.42	0.481
종합복지	65	3.76	0.551	2.61	0.489
기타	24	3.58	0.468	2.36	0.46
전체	407	3.77	0.516	2.41	0.516



2. 시설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분석

유형구분	N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실행도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 체	404	4.23	0.466	3.92	0.524	0.31	.000
아동청소년	18	4.16	0.308	3.95	0.438	0.21	.034
장애인	81	4.40	0.423	3.92	0.542	0.48	.000
노인	134	4.19	0.501	3.96	0.491	0.23	.000
여성	22	4.26	0.419	4.06	0.529	0.20	.063
노숙인	60	4.16	0.435	3.97	0.425	0.19	.005
종합복지	65	4.23	0.482	3.79	0.599	0.44	.000
기타	24	4.09	0.459	3.77	0.675	0.32	.009



심 포 지 엄
토 론

사회복지학계

김기덕 교수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1]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학계 토론 1

자율적이고 공감하는 주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핵심토대

| 김기덕 교수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최근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를 주도해 온 기존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톨릭사회복지 인권’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기쁨을 느끼며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제 자신의 전공에 걸맞고 제한된 지면과 시간의 토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두 분의 제기하신 논의를 포괄해서 가톨릭사회복지 인권에 대한 논의가 교회 밖(세속, 혹은 근, 현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논의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해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드리려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권(human right) 개념의 탄생과 발전은 자연권, 정의, 평등과 같은 개념에 비해 보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인권 개념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연권, 평등, 정의라는 분석 범주에 더해 이 개념이 가진 역사성과 사회성을 포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념범주와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논의는 추상화되거나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구체적인 실천의 결과를 낳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인권을 논리적으로 왜곡하고 편협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공감의 내면화’와 ‘정의에 기반한 옹호의 실천’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인권의 사회성과 연대성을 염두에 둔 관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유경춘 신부님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이 글이 가톨릭이 현대 사회복지와 인권에 던지는 메시지와 실천의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와 인권개념이 가진 깊이와 수월성을 교회 밖의 개념들과 대립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겸손하고 담담하게 논의를 전개하시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신부님께서 교회 안과 밖을 아름답게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세속의 사회복지철학자의 입장에서 유 신부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유 신부님께서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밖의 인권논의와 가톨릭의 인권논의가 서로 다른 점보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시만 저는 가톨릭의 인권논의가 교회 밖의 인권논의의 상이한 부분에 보다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현대의 인권논의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사회의 인권 개념을 주류를 이루는 근대의 인권 개념은 계몽의 시대 이후, 사회와 대립한 개별 인간들의 정체성이 가진 독립적 욕구와 자율적 능력을 사회 공동체가 권위를 가지고 인정함으로써 확립되기 시작한 실체입니다. 달리 말해 이는 결사체와 대립하는 개인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주목하는 인권개념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속하고 인정받고 있는 공동체와 직접 대립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별인성의 분리와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근대의 인권개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인의 내부에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를 원천적으로 담지 못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욕망 추구가 동시에 전개될 때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내적 논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적 자율적 정체성에 근거한 인권개념의 수립은 결국 자원과 물질 제한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여 무한적인 정치투쟁으로 결과하고 결국 스스로의 자율성의 근거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의 권리를 야만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인권개념의 논의에서 간과된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근대적 인권 개념이 개인을 억압했던 전통과 신분으로부터 독립된 개별적 육체의 분리와 감각의 완성에는 성공하였으나 그 대가로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가 가진 공감능력 즉 타인과의 강력한 연대의식,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그리고 타인의 삶이 내 삶의 초월적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의 단초와 범주는 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공감의 인식이 사회적 실천을 통해 경험되고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 판단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회적 실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여야 하며 주체적 개인의 내면을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적 의미에서 권리와 의무의 공감에 근거해야 할 인권 논의가 계약에 근거한 실정법적 논의로 혹은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 느껴지는 생경함과 어색함은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끔 권리와 책임에 명확하지 못하다는 동양문화 혹은 한국인에 대해 비난은 한편으로 서구적 비합리성의 부족을 지적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지사지를 기반으로 감정이입으로 이어지는 인간(人間; 사람사이)적 공감의 내면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를 개인별로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 인권의 담보물로 정할 경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들은 영원히 이러한 인권 범주 밖에서 일정한 부담과 낙인을 가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적 개별 시민의 권리(정치권)를 인권의 출발점으로 삼아 확대하여 나가는 방식은 역사적 사실로서는 부합할지 모르나 도덕철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니 개인별과 권리와 의무의 짝을 지우기보다는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회나 국가를 의무의 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이 자연권적, 평등적, 보편적 인권의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가톨릭의 신앙과 신학체계가 근대 인권논의에 기여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논의의 이념적, 이론적 기초를 유경춘 신부님의 논문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김미옥 교수님이 인권개념을 전개하며 공감과 옹호를 중요한 구성 범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사회과학에서 진행되고 있



는 인권개념이 단순히 인권의 종류나 내용을 더하고 빼는 식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보다는 김미옥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인권과 관련된 상이한 가치론과 인식론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에 공감하며, 인지와 정서를 통한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근대 인권논의가 비워 둔 커다란 공백이며 이러한 공백은 그 빈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적극적 옹호라는 사회정의 차원의 실천으로 메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적극적 옹호에 기반한 정의구현이야말로 가톨릭사회복지이며 동시에 일반 사회복지의 두 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인권실천의 분석에서 사용한 공감과 옹호 개념의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교수님의 분석에서 사용된 지표가 단순히 근대적 인간관과 사회관에 근거한 내용인지 혹은 가톨릭의 신앙과 신학을 담을 수 있는 지표인지의 여부는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의 일부는 김교수님의 논문에서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다루는 이론적 부분에서 이들 개념들이 가진 가톨릭과의 연관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미옥 교수님의 글은, “가톨릭사회복지, 인권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보이듯, 가톨릭사회복지가 (속세적인)인권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톨릭’사회복지적 인권실천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의 방향이 이와 같다 보니 논문의 말미에 제시하신 인권기반실천의 대안들이 물론 그 자체로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다소 일반적인 성격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것은 가톨릭 사회복지적 인권실천이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와 관련된 이념적 입장과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이란 실체가 사회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고 할 때, 현대 인권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성 논쟁의 국가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사회복지가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시민사회의 인권운동이 맺는 연대의 방향들이 국가에 대한 개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실천은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점점 중요하리라고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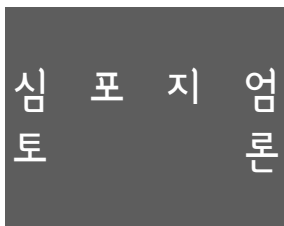
더하여 저는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가톨릭사회복지는 더욱 ‘가톨릭’적이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옹호의 정서를 약화시키고 상호간의 무한 욕구투쟁을 강요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보며 가톨릭사회복지는 더욱 스스로의 고유성을 지키고 자신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인권논의가 공백으로 비워 둔 감성과 공감을 풍성하게 채우고 이를 봉사와 옹호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지속시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시 연대와 보편의 의식을 내재화시켜 나가는 과업이야말로 가톨릭사회복지다운 인권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경춘 교수님이 논문에서 언급하신 말씀인 ‘사회복지 개념’은 ‘신자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곧 ‘인권의 그리스도적 근거 선포와 인권 침해에 대한 단죄’로 집중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핵심은 김교수님의 말씀대로 공감과 옹호 그리고 교육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의미 있는 글들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계

박정우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토론2]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계 토론2

| 박정우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

1. 유경춘 신부의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오늘 주제에는 가톨릭교회, 사회복지, 인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 제1주제를 맡으신 유경춘 신부님께서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세 요소의 관계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우선 유 신부님의 발표를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발표자는 우선 “복지”는 “편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인이 누리는 혼자만의 복지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므로, ‘사회복지’의 ‘사회’라는 수식어에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집단,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이러한 행복한 상태와 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민간이 정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발표자는 ‘사회복지’는 ‘가톨릭 신앙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말하며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이웃 사랑’은 가톨릭 신앙의 본질이며 특히 성경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가



톨릭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복지를 통한 사랑과 헌신의 실천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상징과 도구”이며 “세상을 위한 성사”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가톨릭 신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다 형제자매들”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며,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가톨릭의 사회복지의 어떤 일방적인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형제간의 나눔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톨릭사회복지의 교회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 선포가 진실한 것임을 사회에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으므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발표자는 이어서 인권에 대해 논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를 두며 성경과 신학의 근본사상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다. 이에 대한 신학적 논증으로서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시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실 정도로 인간이 귀하다는 논증을 들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인권 수호는 인간의 해방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므로,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발표자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그 자체가 인권실현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인권이 불가분의 관계라면 굳이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서 가톨릭 신앙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발표자는 앞에서 말한 핵심적인 네 가지 가톨릭사회복지의 요소를 다시 자연스럽게 인권과 연결시킨다.

우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에 해당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나 보잘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일 때 가톨릭사회복지의 이용자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를 통한 사랑과 헌신의 실천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사’라고 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해방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다 형제자매이며 서로 가진 바를 나누어야 한다는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신은 곧 인간들 사이의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인식, 즉 인권 감수성을 요구한다.

넷째,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서, 또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에 대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인식’ 없이는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 결국 사회복지와 인권은 가톨릭교회의 신앙 실천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란 ‘인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둘 다 가톨릭교회의 신앙 실천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상적인 ‘이론’이며 ‘신학’인 이 논증과 교회의 실제적인 실천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숙제라고 제시한다. 특히 “교구차원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혹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전 교구민의 신앙적 실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전 교구민의 관심과 에너지가 이곳에 모아지고 다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사목구조가 정착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톨릭사회복지회’를 포함하여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서울대교구의 “사회사목부”에 속해있는데, “사회사목부”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뚜렷하지 않고 교구사목국의 하위 부서처럼 여겨지므로 “사회복지국”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각주 9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의 논증과 문제제기에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회복지’와 ‘인권’이 불가분의 관계라지만, 과연 ‘사회복지’라는 단어로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 특히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도전하는 정의평화 운동이나,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가치로 인간 뿐 아니라 자연 생태 훼손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환경운동까지도 그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사목부’를 ‘사회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꿀 때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사목위원회’를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2. 가톨릭사회복지회 실천가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면, 과연 가톨릭사회복지 활동 안에 인권기반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둘째 주제의 핵심이다. 발표자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단체의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황과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아쉬운 것은 응답자들의 종교가 그들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점이다.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단체 실천가들 중에서 가톨릭이 54.3%, 기독교(개신교)가 23.3%, 불교가 2.2%, 무교가 19.4%이다. 이들 중 적어도 가톨릭신자라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왔을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권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유경춘 신부님께서 발표하신 것 같이 가톨릭 실천가들이 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 수호라는 의식을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아마도 본당 교육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서 일반적인 인권교육 내용 외에도 영성 교육 과정을 강화해서 유경춘 신부님의 발표문의 내용과 같이 가톨릭 신앙과 사회복지, 인권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의 바탕이 되는 사랑의 실천과 인간 존엄성 수호가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실천가들이 그들 안에 정의와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는 선행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만나는 이용자들에게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주는 성사의 역할을 하며 더욱 기쁘게 사회복지 안에서 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심 포 지 엄
토 론

사회복지현장

김정영 원장 사랑손보호작업장

[토론3]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현장 토론3

| 김정영 원장 사랑손보호작업장 |

먼저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유경춘신부님과 김미옥교수님 그리고 귀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법인께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경춘신부님의 가톨릭사회복지, 왜 인권을 말하는가? 발제문 중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현재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됩니다. 이쯤 되면, 가톨릭사회복지는 결코 인권(人權)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神權)을 말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주권입니다”를 보면서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을 논의 하고 실천할 때 늘 명심해야 할 요점이라 생각합니다.

김미옥교수님의 가톨릭사회복지, 인권기반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 연구에서

1) 실천 및 교육차원

- ① 인권기반실천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재학습
- ② 느린(?) 실천 혹은 반성적 성찰을 동반한 실천



- ③ 다양한 인권교육 기회를 통한 인권관점실천에 대한 이해의 확장
- ④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⑤ 기관장에 관한 차별화된 인권교육

2) 조직차원

- ①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 ② 조직문화의 재구성: 성과와 효율성 강조로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 ③ 기관의 자체적인 인권(혹은 윤리)관련규정의 제정
- ④ 이용자 및 직원 인권위원회의 신설
- ⑤ 인권기반실천딜레마 사례 연구를 제언하고 있는 바, 토론자 또한 위와 같은 발제자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연구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기관들의 실천가를 대상으로 하여 가톨릭인권기반 실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더 채워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문을 기초로 본 기관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과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담아서 방향을 설정 해보았습니다.

첫째, 인권기반실천이 담긴 법인 미션 · 비전 공유 및 핵심가치 존중의 실천문화 조성입니다.

종사자 모두가 법인 미션 및 비전에 따른 핵심가치 존중을 통해서 인권기반마인드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바른 언행과 용모 그리고 물리적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아래 바른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적용 후 평가를 하여 피드백(feedback)하는 실천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 복음화 입니다. 영성적 노력과 실천을 하는 복음정신을 바탕으로 인권기반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둘째, 기본을 재점검 합니다.

인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상식적인 것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를 바



탕으로 한 인권실천 계획을 사례별로 수립합니다. 점검표는 아래 참조 문항을 기관에 맞게 재구성한 점검표를 활용합니다.

*점검표 : 시설운영에 관한 자기점검표(시설운영의 기본 요소들에 관한 주요 질문들) -Tully, K. (1993). Improving residential life for disabled people. Churchill Livingstone. 에서발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2006. 6) “사회복지분야 Jim Ife 교수 초청강연회”자료집 재구성”

셋째, 행동지향성입니다.

가톨릭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고 활발한 의사소통의 환경조성을 하며 조직성원들의 진취적인 의견을 상호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지켜가며 합의되어진 선택된 실천사항들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집중하여 실천합니다.

넷째, 파트너로서의 인식입니다.

이용자를 수혜자에서 파트너로 인식하며 이용자와 논의를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다섯째, 자율성과 주인 정신입니다.

종사자들이 고용된 자로서의 책임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지니고 새로운 인권실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도전을 꾸준히 시도하도록 최대한의 자율성과 책임과 재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 합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과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적 운영을 실천 하며 전문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옹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째, 서로 협력하는 간소한 조직 운영입니다.

간단한 조직구조와 의사전달체계 그리고 간소한 제도화 양식을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여덟째, 법인과 소속기관 및 타 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유관기관 및 타 단체와 협조 체계를 이루어 인권기반실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합적 보완을 합니다.

아홉째, 인권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이용자, 종사자,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에서 합의되어 공포한 인권규정이 실현되는지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들을 함께 개선하고 잘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합니다.

열 번째,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용자, 종사자, 보호자 인권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권강화 프로그램을 실천합니다.

열한 번째, 보호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기관에서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보호자가 알고 가정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인권존중의 실천을 함께 지향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이용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슬로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

2. 개요

종사자들 모두는 근로장애인 개개인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가 존중을 받음을 느끼도록 하고 정보 전달과 생각, 감정을 나눔으로써 근로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하여 서로 신뢰하는 관계 형성을 하는 기본적인 파트너십 실천 사례입니다. 이 슬로건은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기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슬로건을 제출 받아 토론을 거쳐 합의 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나를 존중해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표현력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근로 장애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와 표정 및 몸짓의 비언어까지 듣고 공감해주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합니다.

3. 진행방식

- ① 1일 1회 담당 근로 장애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들어주기
- ② 주 1회 이상 욕구나 문제점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함께 해결하기
- ③ 담당 근로 장애인과 파트너 쉽 형성하기

다음은 제가 소속된 지적장애인시설협의회와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의 실천 안입니다.

첫째, 실천 및 교육차원에서 기관장,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회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눈높이에 맞는 사례별, 유형별, 직급별 연구 주제(**평등권** : 차별금지, 생존권 : 의식주생활·의료 및 건강·안전의 권리·신체 및 정신의 안전의 권리, **자유권** : 자기결정권·종교의 자유·사생활보호권·외부와의 의사소통·입·퇴소의 자유·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회권** : 가족권·사회보장권·교육권·노동권·직업의 선택의 자유·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정치권** : 정치적 표현의 자유·투표권, **문화권** :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 **법 절차적 권리** : 법률상의 도움·시설운영에 참여 등)를 선정하여 월례회시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 있었던 소주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토론하여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매년 말 협의회 소속 기관의 인권실천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수상도 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셋째, 인권기반실천전문교육 및 상담 팀을 구성하여 필요시 아웃리치서비스(Outreach Services)를 제공 합니다.



끝으로 본 심포지엄이 가톨릭사회복지 인권기반 확립과 실천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한보스코 성인의 말씀 중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를 되새기며 “가톨릭사회복지인권기반실천! 저부터 하겠습니다! I DO! ”

감사합니다.



심 포 지 엄
토 론

사회복지현장

이철우 관장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토론4]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현장 토론4

| 이철우 관장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

토론에 앞서서 가톨릭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실천가로서 가톨릭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한번 더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 유경춘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소속된 기관에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김미옥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의 직원이지만 영세받는 과정과 미사 중에 받은 교리지식밖에 없는 무지한 상황에서 신부님의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보통이야기 하는 사회복지와 가톨릭사회복지, 인권에 대한 실천가로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가톨릭사회복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신부님 원고를 접해보니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생각하는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에서 인권을 이야기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가·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평가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시설평가 규정
-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인권과 관련된 그 항목이 예비지표로 등장.
- 2012년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평가에 인권교육과 실천에 대한 항목 추가.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부터 인권교육 편성.

2. 가톨릭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인권은 어떻게 다른가?

-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 이야기 하는 인권은 사회복지 대상자 한 개인이 타인과 비교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경제적·비경제적 욕구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한다면.
- 가톨릭사회복지에서 인권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이 탄생되는 태아 때부터 그가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그 생명 자체로 존엄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새로웠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을 모르고 있던 바는 아니지만 왜 존엄해야 하는 가? 에 대한 신학적 성서학적 근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신부님의 원고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죄악으로 물들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바쳐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 결국 인간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 스스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얼마 전 아는 수녀님이 순교자 축일 미사 강론시간에 들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여담이 생각이 나서 소개할까 합니다.

한 순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아 보지 못한 그 백정이 체포되었습니다. 갇은 고문 중에 배교하라는 관리들의 성화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받아 보지 못한 사람대접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천주교입니다. 저를 형제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 선비님 말씀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형제님도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사람으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어찌 내가 그 하느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하느님께 가고 싶습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하느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가톨릭사회복지의 핵심이고 인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은 물론 각 인간의 내면을 포함한 영원한 구원까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제안

○. 사회복지회는 각 개인이 포함된 환경,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듯이 성당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가톨릭교회의 일선이 성당이라면, 가톨릭사회복지의 일선은 가톨릭사회복지 사회사무부에 소속된 직영·수탁시설을 포함한 등록단체일 것입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을 위해 2013년 사회사무지침에 제시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1인 1봉사가 전개되어 본당과 연계한 사회복지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단순히 수혜만 요구하는 기관이 아닌 생산적 수혜기관으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 교수님께서 인권관련활동조사 항목으로 활용하신 공감, 즉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교리 교육과정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분야별로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녹아난 공동사업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TF팀의 구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신부님과 교수님의 원고를 통해 가톨릭사회복지와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웃은 또 다른 나이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심 포 지 엄
토 론

인권 관련 기관

김덕진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토론5]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인권 관련 기관 토론 5

가톨릭사회복지는 어떻게 인권과 만나는 가

| 김덕진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Human Rights, 人權)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 해왔지만,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지극히 정치적인 언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평등(平等)하게 부여(附與)한 권리(權利)’라고 풀이되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정의와 개념도 변해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에 바탕을 둔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권을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동의하고 이를 존중해왔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권리라는 대목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결정짓는 경제적 상황의 편이함, 교육과 문화향유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지역과 지역. 아무리 양보해서 판단해도 현실사회에서의 불평등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면 ‘인권’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인권을 이야기 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견해,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보지 않고 그저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규정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말이고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인권’은 수시로 충돌 할 수밖에 없다. ‘권리’라는 개념은 ‘이익’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려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물음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수많은 권리들끼리 혹은 이익들끼리의 끝나지 않을 충돌들만이 반복되게 된다. 전통적 인권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체는 모두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다. 하지만 ‘형식’으로는 대등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부자유와 불평등, 불공정한 부의 분배와 분쟁의 불합리적인 해결,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인권의 현실을 무시하고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공허하기만 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가 중요한 정책이 되지 못하던 시절 가톨릭사회복지 또는 가톨릭사회사목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교정사목을 시작한지 40년이 훌쩍 넘었으며 사실상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의 시작이었던 빈민사목, 힘없고 억압받던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노동사목,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차별에 맞서 온 정의평화위원회, 이밖에도 노인복지, 단종독사목, 우리농과 환경사목, 이주민사목, 근래에 서울대교구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DS환자들에 대한 사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던 곳에 누구보다 먼저 가 있었음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대단한 일임이 틀림없다.

발제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1963년 교황 요한 23세가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보호와 신체보호의 권리,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들으로써 보호받을 권리, 진리추



구와 의사표현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 집회와 결사자유 권리, 여가선용의 권리, 이주의 자유,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인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 입장을 한국 교회 내부의 성찰로 돌려볼 필요도 있다. 가톨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을 타인이나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규정하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족한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것을 실현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안에서의 노동의 형태는 어떠한가에 대해 솔직하고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회내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노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차별이나 부당한 점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동안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는가? 시설에서 무엇인가 강요되거나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았는가?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혜와 동정적인 시선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없었는가? 성매매 여성, 비혼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것이며,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세상이 다양화되고 변화하면서 인권도 진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사회의 발전에 걸 맞는 ‘인권’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이들이 구색 맞추기나 생색내기로 한번 씩 끼워 넣는 ‘인권’이 아니라,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자본도 침범할 수 없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인권’이 절실한데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



치에 있고 변화를 이끌 힘이 있다.

주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5년까지 한국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학교, 병원, 시설, 교회 등에서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그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신문 1면 TOP 기사를 장식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목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이들을 끌어안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 발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한국 가톨릭사회복지가 인권과 제대로 만나는 행복한 상상이고 설레는 기다림이 아닐까?

